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3. 5. 2.
No. 91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태한
www.krihs.re.kr

최예슬 부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년 로컬창업은 지역 가치의 창출 및 강화, 지역문제 해결, 생활인구 확보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창업 부문 또는 일부 지역(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청년 로컬창업의 지원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의 흐름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성과는 거두었으나 한계 또한 노출
 -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
 - 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특정 부문에 지원이 한정
 - 부처 칸막이로 정부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 노출
- 경북·충북 중소도시를 사례로 청년 로컬창업 실태를 진단한 결과 지역주민 고용,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자금조달 한계, 창업·거주공간 부족, 지역자원 탐색 기회 부족, 전문인력 확보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부재 등 어려움을 호소

정책방안

- ① (청년 로컬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 재정지원) 예비창업부터 도약단계까지 지원 확대,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시행,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실행,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창업시설 조성자금'의 융자 대상 확대 등
- ② (청년 수요 대응형 창업·정주여건 조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 전환, 창업-정주기반 조성 지원사업 연계, 시내 접근성이 높은 유희공간에 창업·정주 인프라 우선 공급 등
- ③ (인력 양성과 협업체계 구축) 청년 로컬창업자 중심의 컨설팅단 구성과 상시 컨설팅 제공, 로컬네트워킹 거점 역할을 하는 로컬앵커스토어 및 로컬안내자, 로컬창업매니저 육성·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권한 확대, 지자체-지역대학 학점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 ④ (다부처 협업사업 및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유사 목적의 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한 지방 원도심 또는 중소도시 지원형 부처 협업사업 신설 및 실행,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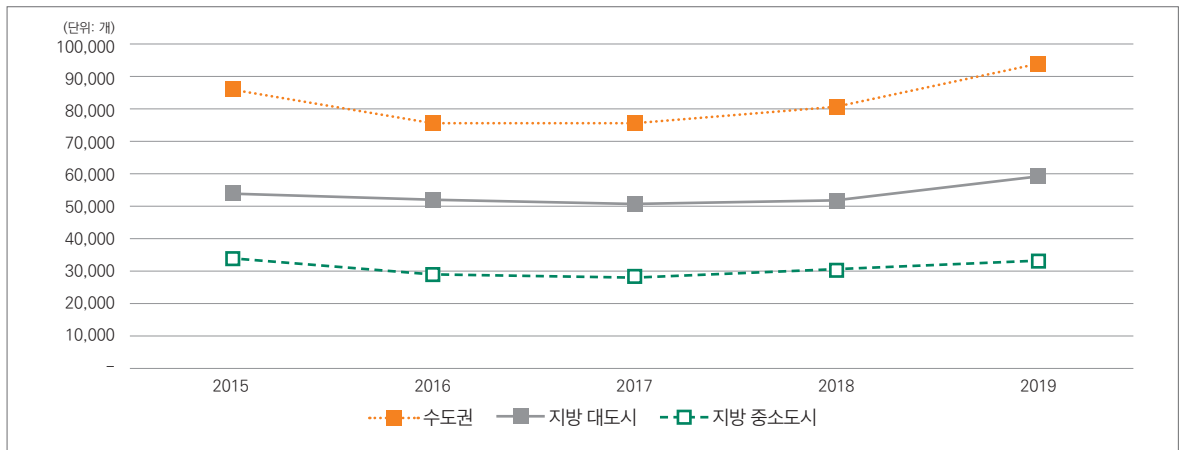
01.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 현황과 특성

(지역별 격차)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

- 2018~2019년 기간 동안 지방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 수도권의 청년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간 청년창업의 수적 차이가 확대
- 전체 청년창업에서 수도권 비중이 50.5%로 나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청년창업기업 수가 비수도권 청년창업기업 수를 역전
- 청년창업에서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2019년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본 서울 강남구(4,438개)와 경북 영양군(21개)의 청년창업 수 격차는 211.3배

그림 1 지역별 청년창업기업 수 변화(2015~2019)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2015~2019)에 기초하여 저자 재구성.

표 1 청년창업기업의 지역별 비중 추이(2015~2019)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도권	48.9	47.4	48.1	49.6	50.5
지방 대도시	30.6	32.5	32.2	30.2	30.1
지방 중소도시	20.5	20.0	19.7	20.2	19.4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지자체, 지방 대도시는 지방 광역시(제주, 세종 포함)와 비수도권 소재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 지방 중소도시는 지방 소재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를 의미.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2019)에 기초하여 저자 재구성.

(지역별·업종별 실태)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 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수도권보다 취약한 상황

- 지방 중소도시에 특화된 청년창업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가진 저위·중저위·중고위기술형 제조업종과 폐업률이 높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유통·개인서비스업이 다수
- 반면 수도권에는 저위기술형 제조업종(섬유, 의류, 인쇄 및 기록매체 등)과 고위기술형 제조업종(의료·의약품,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그리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적 성격을 띠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창업정책의 한계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지만, 기존 창업지원사업 중 다수가 기술창업 위주의 지원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에 집중

- 창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 창업지원 예산의 약 98%가 기술창업에 집중
- 기술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은 대도시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력과 창조적인 인력이 집중된 대도시에 기술창업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 때문(조성철 외 2018)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사업 수와 예산총액은 각각 82개(123.6억 원), 44개(81.8억 원)로 집계되어 대도시-지방 중소도시 간 창업지원 예산에서도 격차가 발생

현재 추진 중인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서 로컬창업은 기술창업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

- 2022년 중앙부처 사업 중 '로컬' 키워드로 검색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69억 원)' 사업이 유일

청년창업의 현실에 부합하고,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간 청년창업의 격차 해소 및 지방 중소도시 내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확대가 필요

02. 청년 로컬창업의 개념과 의의

청년 로컬창업의 정의

청년 로컬창업을 '청년이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

- 최근 로컬 관련 논의를 비추어볼 때, 로컬(local)은 지역을 구분하는 물리적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원 등 잠재적인 지역의 가치와 고유한 정체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해석이 가능
- 청년 로컬창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마을관리 협동조합, 도시재생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등과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나, 로컬창업은 시작점이 '생계를 위한' 영리활동이라는 점에서 타 유형의 기업과 차이

청년세대의 특징과 로컬창업의 부상

(코로나19와 로컬 기반 비즈니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간이 가진 문화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인 골목상권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여행 분야에서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동네와 지역문화를 즐기는 '로컬트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가치소비, 자유노동, 로컬지향성 등 청년세대의 특징) 최근 지역에서 청년 로컬창업 사례가 다수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와 SNS 활용에 익숙하고,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중시하여 재미에 의미를 더한 소비를 선호하면서 온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 가치소비: ‘소확행’, ‘편슈머’, ‘나심비’, ‘미닝아웃’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성향을 보이며, 디지털 기기와 SNS를 통해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소비경험에도 민감하게 반응(최영준 2022)
- 자유노동: 온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추구하고,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유노동 형태의 고용 비중 증가 그리고 ‘n잡러’의 등장
- 로컬 지향성의 가능성: 코로나19 장기화 흐름 속에서 도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한계를 체감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려는 ‘슬로우 라이프’와 직업을 바꾸려는 ‘커리어 체인지’가 합쳐져 ‘로컬라이프’가 하나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5도2촌’, ‘반농반X’ 등이 사례

(로컬창업 지원사업의 본격화) 정부의 청년 로컬창업 지원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2018년 이후 청년 로컬창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면서 청년 로컬창업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배분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청년 로컬창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장소성과 창업의 결합은 개성을 중시하고 이전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창업·유입을 촉진할 수 있어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

- 그러나 주거공간 부족, 자금조달 문제, 지역 적응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사례가 심심찮게 관찰되고 있어, 청년의 내면적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

청년 로컬창업의 의의

(지역의 잠재된 가치 재발견 및 복원·강화) 청년 로컬창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자산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여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

- 대표적인 사례: 지난 40년간 군사지역으로 방치되었던 해변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피비치로 만든 양양의 ‘다운서피리조트’, 3대가 이어온 흑염소 목장을 리브랜딩하여 지역의 명소로 만든 평창의 ‘산너미목장’ 등

(저활용 지역 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 문제 해결) 빈집 등 지역의 유휴공간과 저활용 지역특산물 등을 우선 활용하는 등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 대표적인 사례: 지역에서 저활용된 감자를 활용해 감자빵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유통하는 춘천의 ‘감자밭 카페’, 1980년대 마늘 공장이었던 폐공장과 인근 농가의 친환경 채소와 토마토를 활용해 1년에 약 8만 명이 찾는 수제버거매장으로 재탄생시킨 철곡의 ‘므므흐스’ 등

(로컬 콘텐츠에 기반한 창조 커뮤니티의 조성)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에 없던 상점과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힙(hip)한 직·주·락(Work, Live, Play)’ 콘텐츠를 발굴 및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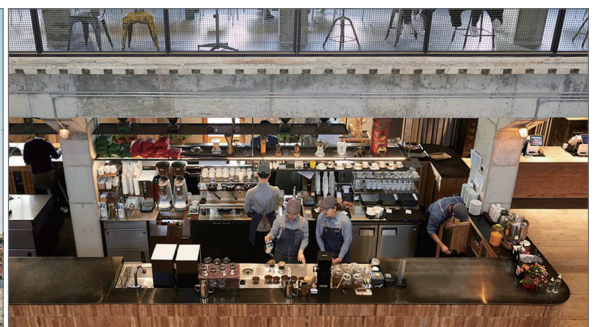
- 대표적인 사례: 지역의 개성을 담아 크래프트 커피 문화를 이끄는 강릉의 ‘테라로사’, 군산 영화동의 낙후된 공간을 문화·예술과 혁신창업 공간으로 변화시킨 ‘로컬라이즈 군산’ 등

(관계·생활인구 확보) 로컬 기반의 독특한 문화, 공간, 콘텐츠를 향유하려는 외지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의 관계·생활인구 확보 가능

그림 2 청년 로컬창업 사례



라운서피리조트(강원 양양군)



테라로사(강원 강릉시)

03. 국내·외 청년 로컬창업 지원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 로컬창업 지원사업 성과와 한계

(개요) 중앙부처 지원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에서 6개 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으로는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4개 광역지자체에서 4개 사업 등 총 10개의 지원사업을 검토

(성과 및 한계)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청년 로컬창업과 청년들의 지역 이주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으나 지원내용, 기간, 범위, 추진체계 등에서 한계를 노출

- 일회성 또는 단년도 지원 후 후속 지원사업의 부재, 지역 정착(관계 맺기 등)과 연계한 창업 지원사업 부족, 예비창업과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거나 특정 부문에 한정된 지원, 부처 칸막이로 중앙부처 간·중앙부처-지자체 간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

일본의 로컬창업 지원제도 및 사업의 시사점

기초지자체와 민간 창업지원사업자 중심의 창업지원 제도 마련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창업지원은 기초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협력·지원하는 역할을 분담
-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사업자, 즉 지역금융기관, NPO 법인 등은 파트너 역할을 수행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장기 및 저리의 무담보·무보증에 기초한 창업지원 용자제도 운용

-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높지 않은 청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지급과 달리 용자 등 금융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증의 용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책임성과 자립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클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를 통한 창업자금 일부 조달

- 지자체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개인 기부자에게 모금한 고향납세금을 지역 내 창업 및 이주교류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총무성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04. 청년 로컬창업의 실태 진단과 정책수요

설문조사 및 현장연구 개요

설문조사와 현장연구에 기초해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 실태와 정책수요 진단

- (조사대상 및 방법) 경북과 충북 중소도시에서 로컬창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수행
- (응답자 표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 로컬창업자는 총 85명(충북 22명, 경북 63명)이었고, 심층 인터뷰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면담자 확보가 가능했던 청년 로컬창업자 12명을 대상
- (조사내용) 일반현황(연령, 업종 등), 활용 중인 지역자원, 로컬창업 계기, 해당 지역 선택 이유, 기업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정부의 로컬창업 지원사업의 정책수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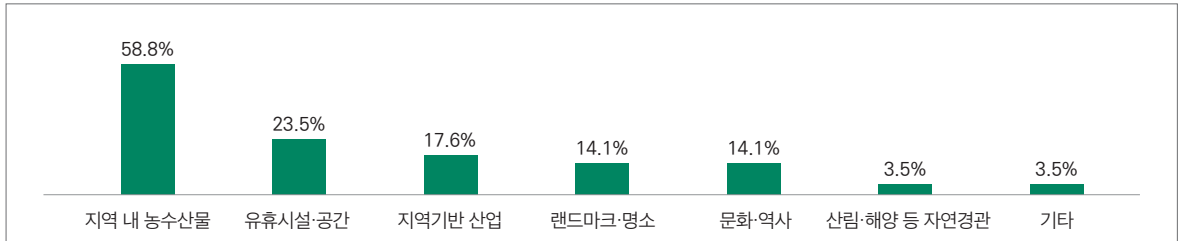
청년 로컬창업의 현황과 특징

(일반현황) 경북과 충북 로컬창업자는 대체로 30대에 창업했고,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년이었으며,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창업 도약단계(창업 3년 차 이상 7년 차 미만)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

(창업배경 및 지역 선택요인)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 정부의 로컬창업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삼은 경우가 다수였으며,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

(지역 자원 활용 현황)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한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58.8%)으로 가장 많았고, 빈집 등 지역 내 유휴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사례(23.5%)도 많은 비중을 차지

그림 3 청년 로컬창업의 지역 자원활용 현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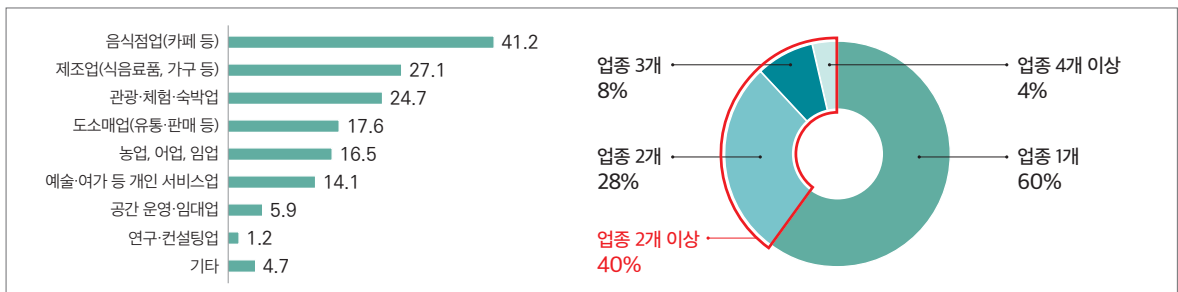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저자 재구성.

(업종 현황) 카페 등 음식점업, 제조업, 관광·체험·숙박업에 다수 분포, 1차+2차 산업 또는 1차+3차 산업 등 매개형 복합산업 형태도 다수 관찰

-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자원에 제조업 등 2차 산업과 음식점, 카페, 공간임대업 등 3차 산업을 유연하게 접목하는 경우 등이 상당수
- 사람들의 선호가 높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통적인 소상공인과 차별화

그림 4 청년 로컬창업 업종 현황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저자 재구성.

(성과) 창업 당시에 비해 평균 종사자 수, 지역주민 고용 수, 매출액이 소폭 상승하였고, 지역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응답자의 58.8%에 달하고 있어 청년 로컬창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기업 성장단계별 현안과 정책수요

청년 로컬기업의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애로사항과 정책수요 진단

- (창업 준비단계와 실행단계) 부지·건물 매입(보증금 포함)과 리모델링 비용,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 생활비 등 '초기 자금 조달'에 이어 '창업·거주공간 마련'과 지역자원 탐색·지역 정착단계에서의 '지역안내자'와 로컬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창업 멘토'가 필요
- (초기단계) 이전 단계에 이어 '추가자금 확보'를 가장 필요로 했고, 로컬사업 모델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판로개척'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지역 정착에 있어 '또래집단 부족', '외지 청년에 폐쇄적인 지역 분위기'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
- (도약단계) 본격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고, AC(엑셀러레이터)·VC(벤처캐피탈)와의 1:1 전문 컨설팅과 1~2년 앞서 창업한 선배 로컬창업자와의 멘토링 등이 필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대상, 기간, 내용 그리고 지원체계에서의 한계

- (지원대상)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이 지역 청년보다는 외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이주와 창업 이후 지역 청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 (지원기간) 지원기간이 대체로 1년 미만으로 짧아서 지역 탐색과 창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로컬창업 특성상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쌓아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 부족
- (지원내용) 로컬창업 이후 전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창업교육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교육이 상시로 이루어질 필요
- (지원체계) 청년 로컬창업자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연속성 확보, 이들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

05. 청년 로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제도 개선방안

지방소멸 대응전략에 있어 청년 로컬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조례 제정) 지역에서 청년 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 로컬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을 제안

공급자 중심에서 청년 로컬창업자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과 전략 수립

- (기업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인 재정지원) 창업 도약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창업시설 조성자금’ 용자대상 확대, ‘지자체-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용자사업’ 및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시행을 통한 다각적인 자금조달 방안 마련

그림 5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용자사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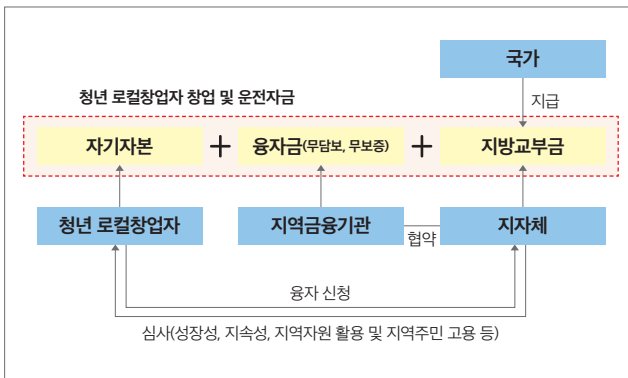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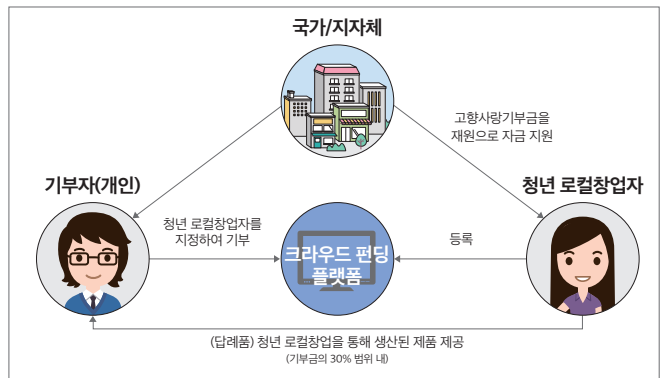


그림 6 고향사랑기부제 연계형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가칭)’ 개념도



- (청년 수요 맞춤형 창업-정주여건 조성) 창업-정주기반 조성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시내 접근성이 높은 유희공간을 대상으로 창업-정주 인프라 우선 공급

인력수급 및 매칭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교류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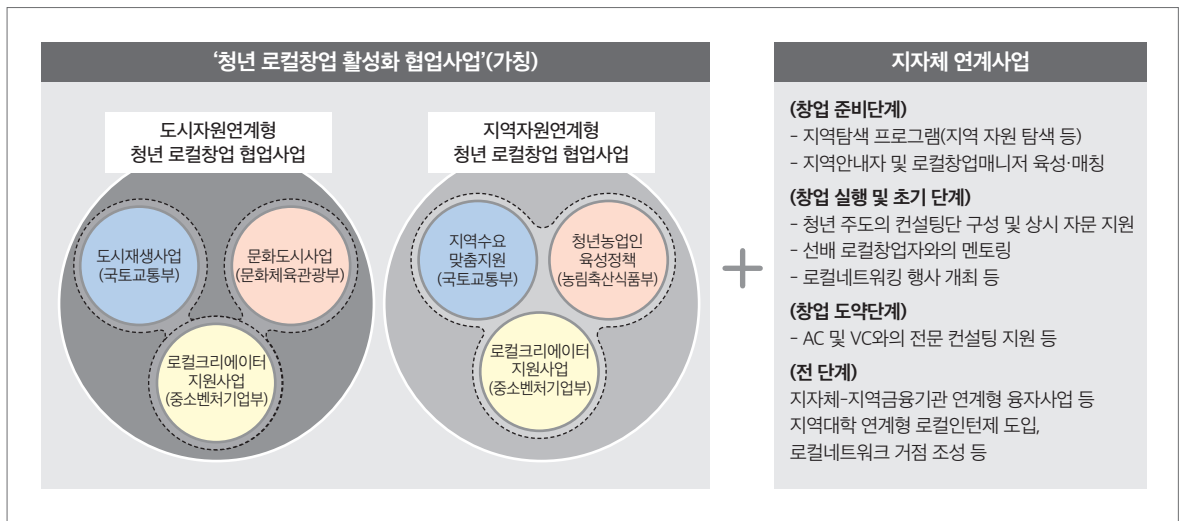
- (지역대학 연계형 로컬인턴제) 청년 로컬창업 업종과 관련된 지역대학 학과와 연계하여 ‘지역 로컬기업 학점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청년 로컬기업의 단기 인력수급 문제 해소

- (청년 주도의 컨설팅단 구성 및 상시 자문 지원) 청년 로컬창업자 주도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일정 기간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
- (로컬네트워킹 거점 조성) 로컬네트워크 거점으로서 지역안내자 역할을 하는 앵커스토어와 로컬창업 전반에서 멘토를 담당하는 로컬창업매니저 육성·활동 지원
- (중간지원조직) 로컬창업과 지역정착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다부처 협업사업과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을 발굴·실행하여 사업의 연계성·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다부처 협업사업) 유사 목적을 가진 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지방 중소도시 지원형 ‘청년 로컬창업 활성화 협력사업(가칭)’ 신설 및 실행
 - (예시) 일차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지원 등)와 국토교통부(창업·거주공간 마련, 교통수단 지원 등)의 사업을 연계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연계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등)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 지원)와 협업을 고려
 - 사업 대상지역 특성에 따라 ①도시자원연계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문화도시 등 지방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원), ②지역자원연계형(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의 성장동력과 주거·생활인프라 및 창업 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원) 청년 로컬창업 협업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중앙부처(인프라 조성)와 지자체 지원사업(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연계한 ‘청년 로컬창업 플랫폼 사업(가칭)’ 신설 및 실행

그림 7 다부처 협업사업 및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예시)



참고문헌 조성철, 남기찬, 장철순. 2018.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최영준. 2022.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BOK 이슈노트 제2022-13호. 서울: 한국은행.

※ 이 브리프는 “최예슬, 조은주, 정우성. 2022.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최예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yschoi@krihs.re.kr, 044-960-0167)
- 조은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ejcho@krihs.re.kr, 044-960-0255)
-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wsjeong@krihs.re.kr, 044-960-0207)